

# 비판적 국제이론과 한반도의 평화과정 -대안적 연구의제의 설정-

구 갑 우(경남대학교)<sup>1)</sup>

## ◆ 논문 요약 ◆

이 글은, 한반도문제의 국제적 성격을 비판적 국제이론을 통해 바라보면서, 한반도 평화과정의 대안적인 인식론적 기반 및 연구의제를 설정하고자 한다. 비판적 국제이론은 강대국 중심의 국제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강대국에 포위된 상태에서 평화를 추구해야 하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비판적 국제이론은 그 이론 내부에서 설명과 예측의 기능뿐만 아니라 윤리적, 실천적 지평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같은 규범적 목표의 실현에 적절한 이론일 수 있다. 이 글의 구성 및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현실주의 국제이론에 근거한 한반도 평화과정을 비판한다. 비판의 핵심은(신)현

실주의에 의거할 때, 한반도의 평화는 분단체제의 현상유지와 동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둘째, 비판적 국제이론의 등장배경 및 주요 개념을 소개하고, 이 이론에 입각하여 한반도 평화과정에 대한 대안적 연구의제를 설정한다. 한반도 평화과정에 대한 비판적 접근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가능한 것의 범위”를 묻는 질문에 하나의 대안적 문제설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평화 및 안보개념의 재구성, 한반도문제의 역사적 구조 및 이행, 대항해게모니의 형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셋째, 결론에서는 한반도의 평화과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한국 외교정책의 방향을 간략히 제시한다.

## I. 문제제기: 이론적 실천

1963년 『국제정치논총』 ‘창간호’에 편집위원회의 이름으로 실린 “한국국제정치학회약사”의 일부를 소개하면서 글을 시작한다:

1) 필자는 익명의 심사자의 귀중한 논평에 감사 드린다.

오늘 날의 국제정치학이 영·미 특히 미국의 진영정책의 요청에 따르고 있음은 사실이다.…… 구미적역사의 산물인 이 이론을 이 땅에서 수용하는 태도를 제창해 본다면 우리는 모름지기 그 역사를 역으로 뒤집어서 재평가하면서 국제정치이론 자체를 재음미 재평가하여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새로이 체계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과 같이 건국과 그 존립마저 국제정치에 거의 완전히 의존하고 있는 곳에서는 차라리 모든 사회과학은 국제정치로부터 시작하여야 할지도 모른다.

오래된 글이지만 문제의식은 낡지않은 것처럼 보인다. 두 이유 때문이다. 첫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적 변수를 배제하고 사고하기 힘든 목표다. 둘째, 그 현실을 설명하거나 변혁하려는 한국적 국제이론 또는 국제이론의 ‘한국적 정체성’ 모색도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제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진영(陣營)정책’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두 ‘국가’인 남북한 관계 또는 민족문제로 환원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동북아지역에서의 냉전적 적대관계의 잔존 및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세력균형의 와해로 발생한 불안정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한반도문제의 국제적 성격을 ‘비판적(critical) 국제이론’을 통해 바라보면서, 한반도 평화과정의 대안적인 인식론적 기반 및 연구의제를 설정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가 이 글에서 구상하는 대안적 평화과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 ‘탈미국적 국제이론’<sup>2)</sup>을 주도하고 있는 비판적 국제이론에 입각하여 한반도의 평화과정을 재구성해 보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2) 국제관계학 시장은 의견상 자기 고유의 이론을 가지고 있는 몇 안되는 학파 또는 접근이 경쟁하는 ‘과점시장’이고, 이 시장에서 이론을 공급하는 지배적 행위자가 미국의 학계다. 국제관계학이 하나의 분과학문으로 등장하는 과정이 미국이 세계권력으로 부상하는 것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즉 국제관계학은 S. Hoffman이 지적하는 것처럼 그 태생이 ‘미국의 사회과학’이었다. K. Goldman, “International Relations: An Overview,” in R. Goodin and H. Klingermann eds., *A New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pp. 401~4; S. Hoffman, *Janus and Minerva* (Boulder: Westview Press, 1987), pp. 3~24.

비판적 국제이론은 그 이론의 형성부터 강대국 중심의 국제이론이 아니었다. 따라서 강대국에 포위된 상태에서 평화를 모색해야 하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주류 국제이론인 (신)현실주의에 의거한 한반도 평화과정 기획이 가질 수밖에 없는 현상유지적 경향에 대한 비판의 무기로 비판적 국제이론은 일정하게 유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론이 설명과 예측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윤리적, 실천적 지평을 정의한다고 할 때,<sup>3)</sup> 비판적 국제이론은 이 두 요소를 이론 내부에서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비판적 국제이론의 도입은 또 다른 이론의 수입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적 맥락을 고려한 비판적 국제이론의 재구성 및 응용을 모색하는 실험은 한반도의 평화과정이라는 규범적인 국제적 실천을 객관적 분석과 결합할 수 있는 유용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가능한 것의 범위”를 묻는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안적 대답을 찾기 위해 비판적 국제이론에 입각해서 한반도 평화과정에 대한 새로운 ‘문제설정’(problematique)을 모색한다. 비판적 국제이론에 따르면, 비판으로서의 이론의 구성, 즉 이론적 실천은 그 자체가 새로운 정치적 실천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 글의 구성 및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현실주의 국제이론에 근거한 한반도 평화과정을 비판한다. 비판의 핵심은, (신)현실주의에 의거할 때, 한반도의 평화는 분단체제의 현상유지와 동의어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둘째, (신)현실주의 국제이론과 달리 국제체제 또는 국제질서를 주어진 것으로 보지 않고 개혁 또는 변혁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비판적 국제이론의 주요 개념을 소개한다. 셋째, 비판적 국제이론에 입각하여 한반도 평화과정에 대한 대안적 연구의제를 설정한다. 평화 및 안보개념의 재구성, 한반도문제의 역사적 구조 및 이행, 대항해게모니의 형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셋째, 결론에서는 한반도의 평화과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한국 외교정책의 방향을 간략히 제시

3) S. Smith, “Positivism and beyond,” in S. Smith, K. Booth, and M. Zalewski, eds., *International Theory: positivism and beyo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p. 13.

한다.

## II. 현실주의적 평화과정 비판: 국제관계와 질서의 문제

현실주의 국제이론에서는 규범적 질문을 제기하지 않거나 그 질문을 부차적 문제로 다룬다. 국제관계는 “생존을 위한 투쟁” 또는 “권력을 위한 투쟁”의 장이기 때문이다.<sup>4)</sup> 고전적 현실주의자들이 유토피아적 사고를 미숙한 사고로 취급하면서도 세력균형의 기저에 놓여 있는 도덕적 합의에 주목하거나 유토피아와 현실을 정치학의 두 측면으로 간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sup>5)</sup> 국제이론에서 역사를 추방하고 초역사적인(timeless) 정치적 구조의 반복적 재생산에 주목하는 ‘체제(system) 이론’인 신현실주의에 이르면 국제이론에서 규범성이 사라지게 되고, 세력균형이론이 정치이론을 대체하게 된다.<sup>6)</sup> 여기서 더 나아가 국가, 즉 강대국은 세력균형의 유지에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조건만 유리하다면 그 균형을 파괴하려 한다는 ‘공세적’(offensive) 현실주의의 주장을 수용하게 되면,<sup>7)</sup> 국제적 유토피아가 강대국의 이익실현으로 전락하는 ‘비극적 현실’에 이르게 된다.

이 현실주의 시각과 이론에서, “실천적으로 효과가 있고 규범적으로 정당한” 국제적 수준에서의 ‘정치질서’의 관념이 존재한다면, 그 질서는 무정부라는 독특한 조직원리를 가진 정치구조가 작동하는 국제체제의 산물인 동맹과 세력균형을 통해, 또는 패권국가의 일방적 힘에 의해, ‘관리’되고, ‘부과’되는 질서다.<sup>8)</sup> 현실주의가 구조적 강제로 수용하는 이 질서는, 갈등

4) B. Crick, *In Defense of Politics of Politics* (London: Penguin Books, 1964); M. Wight, *Power Politics* (Leicester: Leicester University Press, 1978); H. Morgenthau revised by K. Thompson, *Politics among Nations* (New York: McGraw-Hill, Inc., 1997).

5)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E. Carr, *The Twenty Years' Crisis, 1919-1939* (London: Harper & Row, 1964).

6) K.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Mass.: Addison-Wesley, 1979).

7)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W.W. Norton & Company, 2001).

8) N.J. Rengger, *International Relations, Political Theory and the Problem of*

과 분쟁을 최소화하는 질서일 뿐이다. 예를 들어, 신현실주의자들에게는 냉전과 같은 양극체제가 평화를 보장한다. 그러나 냉전을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서구중심적 견해다. 냉전시대에 세계대전은 없었지만, 한국,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니카라구아 등지에서는 수백만의 사람이 전쟁으로 희생되었다. 공세적 현실주의에서는 강대국의 권력정치가 작동하는 국제체제에서 평화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sup>9)</sup>

현실주의 이론에 입각할 때, 탈냉전 시대에 예상할 수 있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질서는 세력균형 또는 단극시대의 패권국가인 미국의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미국과 균형을 이룰만한 국가의 등장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위협적, 일방적 정책의 지속일 수 있다.<sup>10)</sup> 이 둘 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동북아에서 어떠한 세력균형-신냉전적 양극체제, 고전적 세력균형체제, 강대국 협조체제-이 형성되든,<sup>11)</sup> 남북한 관계의 최대치는 냉전적 평화 또는 지속적인 전쟁위협이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현상유지일 것이다. 만약 동북아에서 미국의 압도적 힘의 우위가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미국이 다자적 협력을 모색하지 않는다고 할 때, 우리의 정책자유성은 극히 제약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 현실주의적 예측은 우리에게 불가피한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과거의 냉전적 사건은 현실주의의 적실성의 사례로 제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경험은 현실주의적 경로를 답습하는 원천이 되기도 한다.<sup>12)</sup> 그러나 만약 우리가 부과된 질서로서 현상유지적

---

*Order: Beyo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London: Routledge, 2000), pp. 37~70.

9)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p. xi.

10) 신현실주의적 시각에서 미국의 단극패권이 가지는 위협을 지적하고 있는 글로는, K. Waltz, "Globalization and American Power," *The National Interest* (Spring 2000) 참조.

11) 김태현, "동북아질서의 변동과 한반도," 『국제·지역연구』, 11: 1 (2002), pp. 5~7.

12)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에서는 냉전시기에 '위협의 균형'(balance of threat)을 협력적 안보로 대체함으로써 전통적인 지정학(地政學)을 넘어서려는 정치적 실천 및 이론적 실천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 들어, 한반도의 두 국가인 남북한은 전쟁이 없는 상태로서 평화에 대해서는 양측이 동의하고 있지만, 그 평화를 교란하는 요인으로 남한은 북한의 적화

질서를 수용하지 않고자 한다면, 즉 단순한 유형(pattern)으로서의 질서가 아니라 목적지향성을 담지하고 있는 질서의 구성을 통해 체제를 '개혁'하거나 체제를 '변혁'하려 한다면, 새로운 시각과 이론에 기초한 반성적 사유가 필요할 것이다. 행위자의 의식적 실천 및 개입을 통한 체제의 변혁과 새로운 질서의 구축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바로 그것이다.

### Ⅲ. 국제관계의 정치이론으로서 비판적 국제이론

#### 1. 비판적 국제이론의 문제의식

비판적 국제이론은 현실주의와 달리 국제관계의 질서를 국제체제를 관리하는 '수단'이 아니라 인간해방을 위한 '목적'으로 간주한다.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비판적 국제이론은 '질서의 종언' 또는 '질서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국제이론의 수립을 모색한다.<sup>13)</sup> 즉, 비판적 국제이론에 입각한다면, 국제체제 또는 국제질서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개혁 또는 변혁의 대상이다. 기존의 국제질서가 특정한 목적과 특정한 국가 또는 집단의 이해를 위해 구성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비판적 국제이론을 정초한 콕스(R. Cox)는 이론의 가치중립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제이론을 '비판이론'과 '문제해결(problem-solving) 이론'으로 구분한다.<sup>14)</sup> 비판이론이 지배적 질서의 발생에 문제를 제기하고

---

통일정책을 북한은 주한미군의 존재를 강조해 왔다. 송대성, 『한반도 평화체제』 (서울: 세종연구소, 1998), pp. 21~130. 따라서 한반도는 1950년 전쟁 이후 정전협정으로 평화가 유지되는 사실상의 '준(準) 전쟁'의 상태였다. 정치적 실천의 부재는 한반도의 평화과정을 기획하는 이론적 실천의 부재와 맞물려 있었다. 냉전 시기 동안 한국의 국제관계이론 연구자들은 미국적 국제관계이론의 완제품을 수입하거나 수입대체화를 시도하는 경우에도 그 이론의 보편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박상섭, "한국국제정치학과 외래이론수용의 문제점," 『국제정치논총』, 28집 1호 (1988).

13) Rengger, *International Relations*, pp. 143~66.

14) R. Cox, "Social Forces, States and World Order: Beyo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 R. Cox with T. Sinclair, *Approaches to World Ord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pp. 87~91.

그 질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및 그 가능성을 탐색하는 이론이라면, 문제해결이론은 기존의 지배적 질서를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특정 문제의 해결에 집중하는 이론이다.<sup>15)</sup> 즉 비판적 국제이론에서 이론의 목적은, 이론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문제해결 이론이 포함될 수밖에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국제질서의 '역사적 특수성'(historical specificity)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비판적 국제이론에서 이론은 '비판'(critique)과 동의어다.

어떤 이론이 "더 좋은 이론"인가, 라는 문제는 일차적으로 현실의 구체적 성격과 그 현실에 대한 설명력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이론 또한 현실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할 때, 이론선택의 담론인 메타이론(meta-theory)-이론의 철학적 기초, 즉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 등등-이 가지는 의미를 간과할 수 없다. 메타이론의 차원에서 신현실주의는 현상유지적 평화를 설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과 미래의 "더 좋은 역사서술"을 못하게 하는 이론이다.<sup>16)</sup> 역사 속에서 가능한 것의 한계를 찾으려는 이론, 즉 정치이론이 포함된 국제이론의 구성이 바로 비판적 접근의 문제의식이다.

15) 콕스의 이 공격에 대해 신현실주의 이론가인 K. Waltz는, 문제해결이론에 집중하는 것이 무슨 문제를 야기하는가, 라고 되물고 있다. 비판이론과 주류 이론의 매울 수 없는 간극을 보여주는 대화다. K. Waltz, "Reflections o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A Response to My Critics*," in R. Keohane ed., *Neorealism and Its Cr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6), p. 339.

16) 이론선택의 담론으로서 메타이론에 대한 천착으로는, M. Neufeld, *The Restructuring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참조. 역사이론으로서 사회이론에 대한 언급은, J. Rosenberg, *The Empire of Civil Society: A Critique of the Realist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Verso, 1994), pp. 52~3. 탈미국적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역사학자 J. Gaddis(박건영 역)는 그의 책 『새로 쓰는 냉전의 역사』(서울: 사회평론, 2002)에서 (신)현실주의의 매우 단순한 가정, 예를 들어 힘을 물질적 능력으로 환원하는 가정이 "사람들이 머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측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무시"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즉 (신)현실주의 이론은 더 좋은 역사서술을 가로막고 있다.

## 2. 비판적 국제이론의 주요 개념

탈냉전과 더불어 국제이론이 미국 외교정책의 도구로 사용되는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자기성찰이 이루어지고 있다. (신)현실주의의 철학적 기초에 대한 공격을 통해 국제적 수준에서도 ‘좋은 사회’의 건설을 도모하려는 이른바 국제관계학의 ‘세 번째 논쟁’이 바로 그것이다.<sup>17)</sup> 즉, 국제체제의 지속보다는 변화 또는 변혁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다. 따라서 이론이 현실을 구성하는 능력 및 현실의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이 논쟁의 중요한 주제다. 다양한 형태의 탈미국적, 탈현실주의적, 탈근대적 국제이론이 제시되고 있다.

즉, 비판이론과 국제이론의 접합을 시도하는 비판적 국제이론이 단일의 이론은 아니다. 비판적 국제이론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이론들 사이의 경쟁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이론들의 철학적 기초도 상이하다. 예를 들어, 종속이론이나 세계체제론, 페미니스트 국제관계이론,<sup>18)</sup> 탈근대적, 탈구조주의적 국제이론<sup>19)</sup> 등도 비판적 국제이론에 포함될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이론과 이탈리아의 맑스주의자 그람시(A. Gramsci)의 이론을 결합한 비판적 국제이론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그 이유는 그람시적 접근이 다른 비판적 이론과 달리 체계적 이론을 구축하고 있고, 이른바 ‘성찰적(reflective) 접근’<sup>20)</sup>에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되는 ‘연구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sup>21)</sup>

17) M. Hoffman, “Critical Theory and the Inter-Paradigm Debate,” *Millennium*, 16: 2 (1987).

18)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남성중심적 사고를 고려할 때, 페미니스트적 시각의 도입도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19) 탈근대적/탈구조주의적 국제이론과 비판적 국제이론은 신현실주의의 공격에서는 일정한 동맹을 형성하고 있지만, 사실은 화해할 수 없는 철학적 기초를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인다. 전자는 지식 또는 진리의 기초를 부정하는 입장(anti-foundationalist)인 반면, 후자는 철학적으로 최소주의적 기초를 유지(minimalist foundationalism)하려 한다. Rengger, *International Relations*, pp. 146~7; R. Asheley, “The Achievements of Post-Structuralism,” in Smith et al.(1996).

20) 국제이론에서 이른바 합리적 접근과 성찰적 접근의 구분은, R. Keohane,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State Power* (Boulder: Westview, 1989) 참조.

앞서 지적한 것처럼, 비판적 국제이론은 비판이론과 문제해결이론의 구분으로부터 시작한다. 이 분류는, 기존 국제이론의 철학적 기초 및 그 이론의 성격 그리고 국제체제의 지속과 변화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를 담고 있다. 첫째, 기존의 국제이론 또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는 현실주의, 다원주의/자유주의, 지구주의(globalism)/구조주의는 '실증주의'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세계에 대한 세 가지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sup>22)</sup> 실증주의의 기본 교의(敎義)는, 주체와 객체의 분리,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방법론적 동일성, 사실과 가치의 분리로 요약할 수 있다.<sup>23)</sup> 이 교의에 따르면, 이론과 이론가 그리고 이론과 실제 세계가 분리되며 이론은 실제 세계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모델, 즉 '도구'(tool)로 인식된다.<sup>24)</sup> 따라서 국제이론에서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과 해석과 윤리적 가치가 배제된다. 반면, 비판적 접근에서는 주체의 객관적 실재에 대한 중립적 개입을 부정하고, 지식은 이미 존재하는 사회적 목적과 이해를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즉 주체와 객체의 엄격한 분리를 제거할 때, 국제적 사건은 이론에 존재론적으로 선행하지 않게 된다.<sup>25)</sup>

둘째, 비판적 국제이론의 실증주의와의 결별은, 국제체제 또는 세계질서

21) 이와 더불어 그람시적 국제이론은 실천적으로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제연합을 매개로 1970년대부터 제3세계 국가가 추진했던 '신국제경제질서'(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NIEO) 운동은 그 사례 가운데 하나로 지적될 수 있다. 이 국제기구를 매개로 한 국제질서의 민주화 운동은 그람시적 국제이론의 형성을 가능하게 한 밑거름이었다. R. Cox (with H. Jacobson), "Decision Making," in Cox with Sinclair(1996).

22) Smith, "Positivism and beyond," p. 11.

23) Neufeld, *The Restructuring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pp. 22-38.

24) M. Zalewski, "All these theories yet the bodies keep piling up': theory, theorist, theorising," in Smith et al.(1996), pp. 341~4. 위의 글에서, 이론은 '매일의 실천'(everyday practice)으로 규정되기도 한다. 페미니스트 국제이론가들은 이론을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본다. 즉 '이론화한다'는 것은 매일의 삶의 형태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이론이 생산한 지식이 누구의 지식인가가 중요한 문제다. 다른 한편, 세계질서프로젝트를 주도했던 R. Falk는 국제체제의 지속과 변화라는 시각에서 이론을, 체제유지, 체제개혁, 체제변혁 이론으로 구분하고 있다. R. Falk, *The End of World Order* (New York: Holmes and Maier, 1983).

25) A. Linklater, "The Achievements of Critical Theory," in Smith et al.(1996).

의 변화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철학적 시도다. 신현실주의 국제이론은 국제관계의 원형을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찾고 있다. 시간을 초월한 공간으로서 영토국가체제가 바로 신현실주의의 지리적 가정이다. 따라서 국가들 사이의 경계가 절대화되고, 안과 밖의 분리는 방법론적 구분이 아니라 존재론적 구분으로 전화한다.<sup>26)</sup> 즉, 신현실주의의 철학적 가정에는 이미 국제체제의 변화라는 문제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나 비판적 국제이론은 그 구조의 역사적 변화에 주목한다. 비판적 국제이론은 구조를 객관적 실재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 구조의 '역사적 특수성'을 강조한다. 이 역사적 특수성의 규명이야말로 비판으로서의 이론의 제일차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비판적 국제이론의 '역사적 구조'는 '물질적 능력'과 '관념'(ideas)과 '제도'가 상호작용하는 모형으로, 국제체제나 생산양식과 같은 어떤 추상적 모형에서 도출되는 개념이 아니라 구조와 관련을 맺고 있는 역사적 상황을 고려한 제한된 전체를 지칭한다.<sup>27)</sup>

비판적 국제이론에서는 이 역사주의(historicism)가 사회적 현실이 구조와 주체에 의해 결정된다는 구성주의(constructivism)와 결합된다. 그러나, 정치적 권위의 국제화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미국적 구성주의처럼(신)현실주의와 타협하지는 않는다.<sup>28)</sup> 그리고 행위주체의 정체성이 형성

26) J. Agnew, "Timeless Space and State-Centrism," in S. Rosow, N. Inayatullah, and M. Rupert eds., *The Global Economy as Political Space* (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1994); R.B.J. Walker, *Inside/Outsid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27) R. Cox, "Social Forces," pp. 97~101.

28) 비판적 국제이론의 구성주의에 대해서는, S. Gill ed., *Gramsci, Historical Materialism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의 제 논문들을 참조. 구성주의는 국제정치구조의 변화 가능성을 존재론과 인식론적 수준에서 찾으려 한다는 점에서 신현실주의의 근본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구조의 변화를 관념으로 환원하는 것은 물질주의의 역편향인 관념주의일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시공간에서 사상이 구조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구성주의가 역사주의와 만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에서 구성주의의 도입 및 적용은, 김학성,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서울: 통일연구원, 2000); 이근·전재성, "안보론에 있어 구성주의와 현실주의의 만남," 『한국과 국제정치』, 17: 1 (2001); 이근,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본 남북정상회담," 『국가전략』, 7: 4 (2001) 참조. 그러나 필자는 구성주의가 현실주의나 자유주의와

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의 역할에 주목한다. 비판적 국제이론은 국제관계를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에 선행하는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제관계가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와 내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판적 국제이론은 자본주의적 생산으로부터 자신의 논의를 시작하지만 국가가 자본주의적 축적을 위한 조건을 창출하고 생산의 전체적 구조를 결정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경제결정론으로부터 한 걸음 비껴나 있다. 그리고 세계질서 속에서 국가의 위치 및 상대적 힘에 의해 각 국가가 생산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제약된다고 주장하면서, 생산·국가·세계질서를 통합하는 이론을 모색하고 있다.<sup>29)</sup> 여기서 국가는 신현실주의가 주장하는 것처럼, 전체로서의 나라, 즉 ‘국민적·영토적 총체’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특수한 국가/사회 복합체”, 즉 국가형태로 정의된다.

국가/사회 복합체로서 국가의 재개념화는 안보이론에 있어서도 새로운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sup>30)</sup> 일반적으로 안보연구는 비판적 연구가 가능하지

---

비교할 수 있는 시각 또는 이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A. Wendt가 말하는 것처럼, “구성주의는 하나의 국제정치이론이 아니다.” A. Wendt,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 7. 즉, 구성주의는 이론의 이론, 즉 메타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성주의는 다른 어떤 국제이론과도 접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A. Wendt, “Collective Identity Formation and the International Stat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8: 2 (199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구성주의적 (신)현실주의도 충분히 가능하다.

29) R. Cox, *Production, Power, and World Order: Social Forces in the Making of Hist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7). 예를 들어, 위 책에서는 세계질서의 역사적 구조로, (1) 자유주의적 국제경제의 등장 (1789), (2) 경쟁적 제국주의 시대(1873~1945), (3) 신자유주의적 세계질서(이차대전 이후)를 제시한다. 그리고 이 연속적인 세계질서의 구조는 새로운 국가형태, 새로운 역사적 블록, 그리고 생산관계의 새로운 배열에 의해 그 독특성이 규정된다.

30) 국가/사회 복합체 개념을 도입한다고 해서 반드시 국가중심성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사실 비판적 국제이론은 국가중심성과 탈국가중심성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적 차원의 변혁, 즉 시간, 공간, 사회적 가능성, 일상생활 등의 측면에서 ‘존재론적 전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인식하면서 탈국가중심적 이론지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S. Gill and J. Mittelman eds., *Innovation and Transformation in International Stud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참조.

않은 마지막 보루로 간주되기도 한다.<sup>31)</sup> 현실주의 국제이론에 따르면, 안보의 대상, 즉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대상”은 영토적으로 정의되는 정치공동체이고 그 목적을 추구하는 행위자는 국가다. 국제사회의 형성에 따라 국가안보와 더불어 ‘인간안보’를 고려하는 포괄적 안보개념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무정부상태에서는 ‘강한 국가’가 그 인간안보의 실현을 위한 유일한 매개체라는 사실이 강조되기도 한다.<sup>32)</sup> 그러나 국가안보의 절대화는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는 것이다. 안보의 궁극적 대상은 “사회 속에 존재하는 개인”이고 “구체적 장소에 존재하는 구체적 사람”이어야 한다.<sup>33)</sup> 반(反)국가주의적 안보개념을 도입하고자 하는 비판적 국제이론에서는 안보와 해방은 동전의 양면이다. 즉 해방이야말로 진정한 안보를 생산한다는 것이다.<sup>34)</sup> 그렇다면, 그 안보를 위한 구체적 공간설정의 문제가 제기된다. 즉 비판적 안보연구의 질문은, 공동안보가 강대국에 의한 약소국의 포섭이 아니라 보편적이면서도 차이를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의 건설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비판적 국제이론을 관통하고 있는 개념이 바로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이다.<sup>35)</sup> 그람시는 헤게모니적 지배가 물리력의 독점에 의한 ‘강제’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로 부터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즉 지도력은 강제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제와 동의를 통해 사회의 제 심급(instances)에서 지도력이 행사되도록 국가와 사회를 응집시키는 구조 그리고 그 구조를 재생산하는 사회세력 또는 계급의 연합이 바로 ‘역사적 블록’(historic bloc)이다. 비판적 국제이론은 이 헤게모니 및 역사적 블록의 개념을 세계적 차원으로 확장한다.<sup>36)</sup> 콕스는 국제

31) K. Krause & M. Willams eds., *Critical Security Studies* (Minneapolis: Minnesota University Press, 1997), p. vii.

32) B. Buzan, *People, States and Fear* (London: Harvester Wheatsheaf, 1991).

33) R. Jones, *Security, Strategy, and Critical Theory* (Boulder: Lynne Rienner, 1999).

34) K. Booth, “Security and Emancipation,”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17: 4 (1991).

35) A. Gramsci,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of Antonio Gramsci*, edited and translated by Q. Hoare and G. Smith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71).

적 수준에서의 헤게모니를 단순히 국가들 사이의 질서만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세계헤게모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구조이고, 더 나아가 보편적 규범과 제도와 기제를 가지고 있고, 이에 기초하여 국제관계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행동을 위한 일반적 규칙이 마련된다고 주장한다.<sup>37)</sup> 예를 들어, 이차대전 이후 미국의 헤게모니는 국제기구를 매개로 형성된 사회세력의 역사적 블록으로 설명되고, 이 국제적 역사적 블록은 미국 내부에서 이른바 포드주의 축적체제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형성했던 역사적 블록의 수출품으로 설명된다.<sup>38)</sup>

비판적 국제이론은 세계질서의 형성 및 재생산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그 과정에서 '대항헤게모니'(counter-hegemony)의 형성 가능성을 모색한다. 사실 이 대항헤게모니를 형성해 가는 과정, 즉 헤게모니의 '이행과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비판적 국제이론은 이상주의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콕스는 초기에 국가적 경계 내부에서의 지난한 진지전을 통해 형성되는 새로운 역사적 블록을 세계질서의 변화를 위한 동력으로 파악한 듯 하다.<sup>39)</sup> 그러나 지구화의 전개와 더불어 자본의 권력이 확장되고 심화되는 과정에서 민주적 집합행동을 위한 정치적 행위자로 등장하고 있는 지구적 사회운동-평화, 인권, 민주주의와 같은 보편적 이슈에 기초한 사회운동, 실업, 홈리스(homeless), 빈곤과 같은 소비영역에서의 사회운동, 노동운동의 실천을 통한 세계질서의 변혁을 사고하고 있다.<sup>40)</sup> 즉 지구적

36) 국제이론에 그람시를 도입하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그람시의 체 개념들이 생성된 "역사적 맥락이 고려되지 않고" 직수입되고 있다는 신랄한 비판에 대해서는, R. Germain and M. Kenny, "Engaging Gramsci,"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24 (1998)을 참조. 그람시적 접근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다.

37) Cox, "Gramsci, Hegemon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Cox with Sinclair(1996), p. 137.

38) M. Rupert, *Producing Hegemon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39) Cox, "Gramsci, Hegemon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Cox with Sinclair(1996), p. 141.

40) 콕스는 이 세 운동의 연대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지만 과거와 같이 노동운동이 헤게모니를 행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인정하고 있다. R. Cox, "Civil Society at the Turn of the Millennium,"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25

시민사회의 등장과 더불어 비판적 국제이론은, 기존의 국민국가라는 정치공동체의 구속을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탈주권적(脫主權的) 정치공동체 및 그 공동체의 민주적 통치를 모색하고 있다.

#### IV. 한반도 평화과정에 대한 비판적 접근: 연구의제의 설정

비판적 국제이론에 입각한다면, 평화는 (신)현실주의가 가정하는 것처럼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비판적 국제이론은 기존의 강대국 중심의 질서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질서의 개혁 또는 변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판적 국제이론은 그 질서 내부에서의 협력 및 제도화를 도모하는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neoliberal institutionalism)와도 구분된다.<sup>41)</sup> 비판적 국제이론은 강대국 중심의 국제이론인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서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 그 시각이 이상주의가 아니라 가능한 것의 범위를 찾는 '새로운 현실주의'라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비판적 국제이론이 한반도 평화과정의 기획에 줄 수 있는 함의를 "경로탐색적 연구의제"의 형태로 제시한다.

##### 1. 비판이론과 한반도 평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비판이론의 구성 가능성을 타진해 볼 필요가 있

(1999). 정치공동체의 근본적 변혁에 대한 모색으로는, A. Linklater, *The Transformation of Political Community* (Cambridge: Polity, 1998) 참조.

41)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는 신현실주의와 메타이론을 공유하면서 신현실주의가 직면하고 있는 변칙을 설명하기 위해 신현실주의에 보조가설을 보조한다.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는 국제정치구조가 무정부상태라는 가정에 동의하면서도 행위자들이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상호이익(mutual interests)이 존재하고 제도화 정도에 있어 편차(偏差)가 국가들의 행태에 실제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국제제도를 매개로 협력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R. Keohane, *After Hegemon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다. 세계에서 가장 긴장이 높은 지역 가운데 하나인 한반도에서 나름의 철학적, 이론적 기초를 가지는 ‘평화학’(peace studies)이 발전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현실주의 이론의 득세가 그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실주의에 입각할 때 한반도의 평화는 군사력균형을 통한 억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힘들다. 반면, 비판적 국제이론에서 평화는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비판적인 평화연구가 갈통(J. Galtung)이 지적하는 것처럼, ‘적극적 평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내적, 국제적 차원에 존재하는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착취와 같은 ‘구조적 폭력’, 그리고 이 폭력을 정당화하는 기제로서 ‘문화적 폭력’의 제거가 필요하다.<sup>42)</sup>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는 국내적, 국제적 수준에서 전쟁을 야기할 수 있는 근본적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북한과 미국 그리고 남북한의 군사적 갈등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제위기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간주되는 것도 적극적 평화의 맥락에서다.<sup>43)</sup> 북한의 내부붕괴를 통해 냉전의 해체가 이루어질 때 엄청난 경제비용이 지출될 수 있고, 또한 열전(熱戰)의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북한경제의 재건은 한반도 평화과정에서 필수적 요소다. 그러나 북한은 가시적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소유체제의 개혁이나 시장기제의 도입 등과 같은 근본적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sup>44)</sup> 토지정리사업이나 연합기업소의 재편, 과학기술정책의 중시 등의 변화가 보이기 는 하지만, 북한 지도부는 여전히 ‘우리식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공동이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는 남북한 경제협력과

42) J. Galtung, 강종일 외 옮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서울: 들녘, 2000). 갈통의 평화개념이 평화가 가지는 의미내용을 무한히 확대하고 결과적으로 그 개념 자체를 애매하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渡辺昭夫 외 엮음, 권호연 옮김, 『국제정치이론』 (서울: 한울, 1993), pp. 218~21.

43) 동일한 맥락에서 남한 내부의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의 존재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도 적극적 평화의 실현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구갑우·박건영, “자유주의 국제정치경제 이론과 남북한 관계,” 『국제정치경제연구』, 3집 (2001), pp. 73~4.

44) 북한경제 전반의 점검과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김연철, “북한의 탈냉전 발전전략,” 『창작과 비평』 30: 2 (2002), pp. 41~53 참조.

북한을 정상국가로 변하게 할 수 있는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의 관계개선이 북한경제의 재건을 위한 외적 환경이라고 할 때, 북한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포용'이 한반도 평화의 조건임을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 2. 남북한 관계와 안보개념의 재구성

지구적 수준의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냉전적 구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한반도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국제정치에서 군사적 문제는 여전히 중요하다. 한반도에서는 재래식무기, 대량살상무기, 핵무기 등이 주요 의제이고 또한 중국과 대만 사이의 군사적 긴장도 존재한다. 북한위협론을 빌미로 한 미국의 미사일방어계획도 군사적 긴장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다. 또한 중국, 동남아, 일본 사이에서는 영토분쟁 및 해로(海路)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다. 담론의 수준에서도 일본의 군국주의화라든지 중국의 군사적 패권국가로의 부상 등이 언급되고 있다. 그러므로 동아시아에서 탈냉전과 군사적 경쟁의 종언을 등치하는 것은 매우 순진한 발상일 수밖에 없다.

안보개념의 재구성과 관련하여 먼저 주목해야 할 사안은 남북한의 군비경쟁이다. 특히 남북한은 전쟁을 거쳤기 때문에, 전통적인 안보개념을 강하게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다. 남북한의 군사력 경쟁에 대한 한 연구에 따르면, 1980년대 말부터 한반도에서는 남한의 전쟁수행능력 대 북한의 억지능력의 증강-즉 비재래식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및 배치-이라는 '비대칭적 군비경쟁'(asymmetrical arms race)이 진행되고 있다.<sup>45)</sup> 따라서 남북한 관계에서 남한의 전쟁수행능력 우위 대 북한의 억지력 우위라는 비대칭적 군사력 균형이 존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 자체에는 평가자의 편견이 반영되곤 한다. 북한의 군사적 '능력'과 북한의 군사적 '의도' 가운데 후자에 초점을 맞추는 현실주의 이론가는 사실 현실주의 대 자유주의의 이론 논쟁에서 후자를 지

45) 함택영,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서울: 법문사, 1998).

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모순이 모순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이기도 하다. 남북한 관계는 정상적인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남북한은 각기 고유의 국가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호 '적대'를 반복하면서도 담론의 영역에서는 통일을 당위로 내세우는 독특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sup>46)</sup> 즉 남북한 관계는 때로는 "주권국가의 정체성"이 다른 한편으로는 "분단국가의 정체성"이 발현되는 복수정체성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sup>47)</sup> 후자의 정체성 때문에 남북한 관계에서는 한 쪽의 안보증강이 다른 쪽의 안보를 감소시키는 '안보딜레마' 및 통일을 매개로 한 명시적 '안보위협'이 상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남북한 관계에서 후자의 정체성에 근본적 변혁이 있지 않는 한, 군비경쟁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비판적 국제이론에 입각한다면 한반도의 분단구조에서 군사적 능력으로 표현되는 물리적 능력은 관념의 공유를 통한 정체성의 변화 및 그 변화를 담지한 제도의 건설로 제약될 가능성도 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은 이 정체성의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다. 정상회담은 남북한 서로의 '국가적 실체'를 인정한 사건이었다. 쌍방이 분단국가의 정체성을 탈피하고 정상국가 대 정상국가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그리고 그 성과로 개최된 남북국방장관 회담과 비무장지대를 관통하는 철도연결에 대한 합의는 군사적 신뢰구축의 한 사례로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군사적 신뢰구축은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제다. 남북한이 각기 '절대안보'를 추구하게 되면, 군사적 신뢰구축은 불가능하다. 대단히 역설적이지만 분단구조가 작동하는 한 한 쪽의 절대안보는 안보위기를 산출할 수 있다. 북한의 선택적 도발을 억지하면서도 북한의 안보불안감을 자극하지 않는 '합리적 충분성'(reasonable sufficiency) 원칙이 필요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sup>48)</sup> 따라서 한반도 평화과정을 기획하면서 안보개념을 재구성

46) 이것이 바로 분단체제론의 문제의식이다. 자세한 내용은, 백낙청,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4) 참조.

47) 이근·전재성, "안보론에 있어 구성주의와 현실주의의 만남," p. 192.

48) 함택영, "정상회담 이후의 남북한 관계 및 평화체제 전망," 서대숙 외, 『정상회담 이후의 북한: 남북 관계의 변화와 전망』 (서울: 경남대학교 출판부, 2002), p. 278.

한다고 할 때, 일차적으로 남북한 사이의 신뢰구축에 기반한 '공동안보' 개념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의 '공동'이란 어느 한편의 이익으로의 흡수가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합의를 통해 형성되는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

공동안보가 적극적 평화의 기초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한 국내의 정치경제적 민주화와 함께 가야 한다. 국제체제를 통해 단위체의 행태를 도출하는 현실주의자들은 국가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이 국제정치경제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유용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비판적 국제이론에서 지적하듯, 생산방식을 포함한 시민사회의 변화는 국가형태 및 세계질서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한반도에서 평화공존이라는 이상이 실제의 의제로 상정될 수 있었던 조건 가운데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1997년 남한의 IMF 위기와 1990년대에 들어 심화되기 시작한 북한의 경제위기였다. 이 두 위기는 남북한에게 흡수통일이 현실적으로 이루어기 힘든 과제임을 알려준 사건이었다.

안보개념의 재구성을 위한 중요한 계기 가운데 하나로 F-X 사업에 대한 시민사회의 개입을 들 수 있다. 남한의 시민사회는 미국산 무기의 구입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했다. 결국 시민사회의 요구가 무산되기는 했지만 우리는 이 과정에서 안보개념의 재구성을 위한 대안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안보정책과 외교정책이 몇몇 전문가에 의해 결정되는 영역이 아니라는 인식의 확산이다. 즉 외교정책과 안보정책의 '민주화'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둘째, 안보정책의 민주화는 남한의 적정군사력 규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군사력으로 환원되지 않는 안보개념의 발견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안보개념에서 군사적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은 이상이다. 그 현실을 인정할 때, 역사적 경험을 통해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대안 가운데 하나가 공동안보를 통한 군축이다. 이 공동안보는 남북한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차원에서도 도입가능한 대안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남한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는 안보의 대상과 주체로서 인간을 상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유럽에서 개발된 개념이기는 하지만, 상이한 체제가 공

동으로 안보를 관리하려는 ‘협력적(co-operative) 안보’와 정치군사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 그리고 인권을 동시에 고려하는 ‘포괄적(comprehensive) 안보’는 소극적 평화를 넘어 적극적 평화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과정에서 다리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다.

### 3. 한반도문제의 역사적 구조와 그 이행

냉전시대 한반도문제는 자본주의진영과 사회주의진영의 대립의 맥락에서 구성되었다. 한반도의 정전체제는 냉전적 대립선을 상징했다. 따라서 한반도문제는 미국과 소련의 갈등을 복제한 남북한의 적대였다. 남북한 관계는 분단국가적 정체성의 지속적 재생산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반도에도 냉전의 기간 동안 세계질서의 변화에 따라 화해와 협력의 공간이 열리기도 했다. 1970년대의 데탕트 분위기가 형성됨에 따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 발표되기도 했다. 그러나 남북한은 그 성명 이후 각기 권위주의체제를 선택하면서 남북한 관계는 다시금 적대적 관계로 복귀했다.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촉발된 지구적 수준에서의 냉전의 해체는 한반도문제의 역사적 구조를 변화시킨 동인이었다. 1991년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함으로써 서로의 ‘국가적 정체성’을 제고했다. 그리고 같은 해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에 합의하면서 적대가 아닌 ‘공동의 이익’-정치군사적 대결상태의 해소, 긴장완화와 평화보장,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추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냉전의 해체는 비대칭적으로 전개되었다. 예를 들어, 남한은 러시아, 중국과 수교를 했지만, 북한은 미국, 일본과 수교를 하지 못하고 비정상적 관계를 계속하고 있다.

이 비대칭성은 동아시아에 등장하고 있는 탈냉전적 역사적 구조의 불안정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근처에는 미국의 헤게모니 행사 방식의 불안정이 자리잡고 있다. 냉전시대에 미국은 자본주의진영에서 강제와 동의를 통해 헤게모니를 행사했다. 이 역사적 구조 속에서 남한은 미국과 군사적 동맹을 토대로 냉전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안보국가’이면서

동시에 미국의 지원 아래 권위주의적 독재체제가 주도한 ‘발전국가’라는 국가형태를 가질 수 있었다.<sup>49)</sup> 이차대전 이후 미국이 창출한 ‘제국’에서 피 지배자들은 협력할 것인가, 아니면 저항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었다.<sup>50)</sup> 즉 미국의 헤게모니에는 동의의 기제가 작동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냉전 이후 세계의 단일 패권국가로 부상하면서 동의 보다는 강제를 선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탈냉전 시대에 미국의 패권도 직접지배나 신식민지 형태의 종속이 아니라 미국적인 역사적 블록의 수출로 유지되고 있다.<sup>51)</sup> 한국의 IMF 위기는 미국경제의 신자유주의적 전환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사건이다. 동아시아의 금융·외환위기는 미국 헤게모니의 불안정을 반영하고 있다. 미국은 안보, 생산, 금융, 지식의 영역에서의 구조적 권력을 토대로 ‘비영토적인 제국’을 건설하고 있지만,<sup>52)</sup> 그 제국은 냉전시대의 제국처럼 헤게모니에 기초하고 있지는 않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동의를 배제한 패권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동북아에서 이 불안정은 점점 더 제고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동북아에서 군사적 패권의 안정적 재생산을 도모하려 하고 있다.<sup>53)</sup>

따라서 헤게모니적 구조가 군사력으로 표현되는 물질적 능력만으로는

49) 이차대전 이후의 세계질서의 경제적 기초는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의 영토화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산물이 바로 국가자본주의들-예를 들어, 복지국가와 발전국가-의 세계였다. 구갑우, “지구적 통치와 국가형태: 시민국가의 전망,” 『경제와 사회』, 45호 (2000), p. 17. 한국의 국가형태와 관련하여 재미있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만약 냉전체제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1997년 IMF 위기가 발생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 그것이다. 미국은 동북아의 세력균형을 붕괴시킬 수도 있는 남한의 경제위기를 최소화하려 했을 것이다. 비판적 국제이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국가형태의 결정요인에 세계질서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한 듯이 보인다. 예를 들어, 구갑우, “자유주의, IMF 위기, 그리고 국가형태의 변화,” 『경제와 사회』, 40 (1998) 참조.

50) Gaddis, 『새로 쓰는 냉전의 역사』, p. 479.

51) L. Panitch, “The New Imperial State,” *New Left Review*, 2 (2000).

52) S. Strange, *States and Markets* (London: Pinter Publishers, 1988).

53) 부시행정부의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에서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은 미국의 ‘잠재적’ 적국일 뿐이다. 그리고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세계질서에 일단은 순응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갖추어지지 않는다고 할 때, 동북아 수준에서 미국의 일방주의가 헤게모니로 전화할 구조적 여건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반공(反共)을 대체할만한 관념의 공유도 보이지 않는다. 동북아의 자본주의국가들은 미국식 경제적 신자유주의를 도입하고 있지만, 그 때문에 경제위기의 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상태다. 더불어 이 경제위기를 조절할 제도 또한 부재하다. 아시아-태평양 공동체(APEC)는 정책조정을 합의할 수 있는 기구라기보다는 정책협의체 수준일 뿐이다. 더불어 군사적 측면에서도 냉전시대의 세력균형을 대체할만한 제도도 보이지 않는다.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한 안정적인 헤게모니적 구조가 출현하지 않고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 각 국은 한반도 문제가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을 계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발발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주변의 국가들-러시아, 중국, 일본-은 반대의사를 밝힐 것이다. 그러나 주변국가들이 원하는 한반도의 평화는 분단체제의 현상유지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 현상유지를 위해서도 한반도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일정한 협정 또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에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관계다. 좀더 좁히면 미국의 대북한정책이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최우선의 정책적 관심은, 북한의 미사일의 생산과 수출의 금지 그리고 검증가능한(verifiable) 핵사찰에 있다.<sup>54)</sup> 이 정책목표는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견을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또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도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은 별 차이가 없다. 두당은 북한이 살기 매우 힘든 이상한 나라로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여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도 있는 '강패국가'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sup>55)</sup> 그러나 민주당과 공화당은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방법론에

54) 미국은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냉전시대에 유지했던 핵우위를 통한 국가안보의 달성이라는 정책을 쉽사리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박인휘, “국제안보와 미국의 안보전략: 합리성의 극복과 미국 핵전략의 변화,” 『평화논총』, 5: 2 (2001).

55) 이 정책목표와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클린턴 정부’에서 대북조정관을 지낸 W. Sherman의 생각이다. W. Sherman, “Sunshine Through Cloudy Skies: Pea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International Conference in Commemoration

있어서는 차이를 보인다. 클린턴 행정부는 포용을 통해 북한의 위협을 제거하려 했다.<sup>56)</sup> 반면, 공화당은 북한의 위협을 미사일방어체계의 구축을 위한 명분으로 활용하면서, 협상자체가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공격적 방치’(hawkish neglect) 또는 비포용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을 의제로 상정한 것도 그 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부시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응징으로 ‘역확산(counter-proliferation) 정책’과 미사일방어체계를 준비하고 있다.<sup>57)</sup>

결국 문제는, 강압을 통해 북한의 붕괴를 유도할 것인가, 아니면 북한을 포용하면서 현상유지를 추구할 것인가, 로 요약할 수 있다.<sup>58)</sup> 예측은 쉽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전자가 많은 비용이 드는 선택임은 분명하다. 만약 한반도 분단체제의 현상유지가 미국의 이익이라면, 북한에 대한 강압은, 잠재적 수정주의국가인 중국에서 온건파가 정치적 입지를 상실할 우려가 있고 중국의 북한에 대한 독점적 영향력을 회복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sup>59)</sup> 더불어 북한의 붕괴가 가져올 한반도의 불안정은 미국의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의 국가이익을 군산복합체의 이익으로 환원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냉전시대의 포드주의적 축적체제에서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축적체제로 전환했다고 할 때, 생산자본 및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이 미국에게는 국가이익의 기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이 초국적 자본의 이해에 조응할 수 있는 세계질서 및 동북아질서를 또한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3년은 미국의 국가이익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역사적 구조가

---

of the 30th Anniversary of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May 23~24, 2002.

56) 결국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2000년 10월 클린턴 행정부와 북한의 공동 커뮤니티는 향후 북한과 미국의 긍정적 관계개선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1994년 북한과 미국의 기본합의의 준수, 북한의 미사일실험 유예 등이었다.

57) 박건영, “부시 정부의 동아시아 안보전략과 제약 요인들,” 『국가전략』, 7: 4 (2001), pp. 104~17.

58) K. Oh and R. Hassig, *North Korea: Through the Looking Glas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0), pp. 210~2.

59) 박건영, “부시 정부와 한반도,” 『한국과 국제정치』, 17: 1 (2001), p. 144.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여주는 해가 될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실험 유예시 한이고 동시에 북한과 미국의 기본합의에 따라 KEDO가 경수로 1기를 북한에 제공해야 하는 해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경수로 지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동의에 기반한 헤게모니적 구조를 창출할 것인가, 아니면 일방주의를 통한 군사적 패권을 추구할 것인가, 라는 선택의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한 미국 연구자의 표현처럼, 후자가 무분별함이라면 전자는 비접합이 아니라 용기일 수 있다.<sup>60)</sup> 역사적 구조의 이행시기에는 안정적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시기보다 훨씬 더 '행위자'의 의도와 능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는 국가 및 사회세력의 개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 4. 대항헤게모니의 형성

미국은 한반도문제의 주요 당사자 가운데 하나다. 미국은 정전협정의 당사자 가운데 하나일 뿐만 아니라 남한군의 전시 작전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탈냉전 시대에 한반도문제의 주요한 축 가운데 하나인 북한의 핵개발 의혹 및 미사일실험에 대한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행위자다. 우리는 미국의 배타적인 이익구조 또는 그 구조의 전환에 한반도의 분단체제가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사건들을 보곤 한다. 예를 들어, 1992년 5월부터 북한의 핵을 둘러싼 북한과 미국과 IAEA 사이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남북의 합의로 만들어진 「남북기본합의서」 체제가 붕괴하기도 했다. “인간의 얼굴을 한 현실주의”로서 비판적 국제이론은 역사적 구조가 부과하는 제약을 인정하면서도 윤리와 정치의 실현을 위한 대항헤게모니의 형성의 가능성과 방법을 찾으려 한다.

분단체제의 현상유지를 넘어서는 평화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역사적 구조가 부과하는 제약 속에서 행위자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행위자의 선택이 결국은 구조를 변경시킬 수 있는 힘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행위자의 선택은 구체적 상황에서 구체적 문제의 해결

60) J. Barry, *The Sword of Justice* (London: Praeger, 1998), p. 166.

을 위해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capability)이다. 이 능력을 물질적 능력으로 환원할 수는 없다. 우리는 힘의 비대칭이 분명한 상황에서도 지혜로운 행위자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을 보기도 한다. 남북한 관계가 북한과 미국 관계에 종속적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남북한 관계로부터 한반도의 평화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다.

남북한이 합의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과정을 기획하고 진행한다고 할 때, 냉전과 같은 진영대립이 사라진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가가 명시적 반대의사를 밝히기란 어려운 것이다. 독일은 냉전 상황에서도 동서독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도 했다. 미국의 국가이익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미국 국내의 정치과정 및 국제정치의 역학 속에서 구성되는 것이다. 즉 (신)현실주의적 시각에서처럼 미국의 국가이익을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작지만 중요한 차이는, 남북한이 한반도 평화과정에서 제한적이지만 상대적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는 원천이기도 하다.

한반도 평화과정의 출발점은 남북한의 신뢰구축이다. 「남북기본합의서」체제의 좌초가 부분적으로 구조적 제약 때문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남북한 사이의 충분한 신뢰구축의 결여 및 남한 국내정치의 분열이 그 붕괴의 요인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의 신뢰구축은 남북한 공동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남북한의 공동안보와 남북한의 경제협력은 신뢰구축 없이는 진행될 수 없는 사안이다. 남북한 사이의 안보딜레마를 벗어나기 위해 기능적인 상호의존 관계의 지속에서 발생하는 공동의 이익과 그 이익의 다른 영역으로의 침투확산에 주목하는 자유주의 이론은 남북한 관계에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sup>61)</sup> 특히, 단기간의 군사적 신뢰구축의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경제적 협력을

61) 급진적, 비판적 자유주의 이론은 국가가 아닌 개인과 집단을 위한 ‘해방의 공간’으로 국제정치경제의 장을 사고하기도 한다. 국제평화와 협력에 대한 자유주의의 낙관적 가정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 이외의 다양한 행위자의 능동성에 주목하면서 그 행위자들의 이익, 가치, 행동의 공동체, 즉 ‘국제공동체’의 실현을 매개하는 국제체도의 역할을 강조한다. D. Long, “The Havard School of Liberal International Theory,” *Millenium*, 24: 3 (1995). 비판적 국제이론과 급진적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은 상당한 공유점을 가지고 있다.

통해 정치군사적 문제로 나아가는 우회의 길이 적절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일정하게 북한의 변화를 생산할 것이고,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능주의적 접근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과거로 회귀하거나 회귀하려는 유인이 발생했을 때 사실 북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는 듯이 보인다. 최선의 방법은 지속적인 공동이익의 창출 및 그 공동이익의 배분 몫을 둘러싸고 야기될 수도 있는 남북한 사이의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남북한 관계의 다양한 제도화를 통해 북한의 국내 정치에 우회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의선의 연결과 개성공단의 건설과 같은 기능망의 확대와 그에 기초한 '남북한 평화협정'이 이루어질 때, 남북한 관계의 역전을 막을 수 있는 제도화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이 제도화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의 확장은 남북한 관계의 역전을 야기하는 또 다른 변수 가운데 하나인 남남갈등을 제어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전형적인 기능주의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은 정부와 자본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비판적 국제이론에서 지적하듯, 안정적인 헤게모니적 구조는 다양한 행위자의 동의로 설립되는 역사적 블록의 형성을 통해 가능할 수 있다. 남북한이 민족이익과 국가이익을 논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개방화된 비판적 공론장을 건설하고 이를 매개로 새로운 '역사적 주체'를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출발점이다.

한반도문제의 국제적 성격을 고려할 때,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는 국제협력 없이는 진행될 수 없는 사안이다. 1997년부터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그리고 평화체제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된 남북한, 미국, 중국의 4자회담은 이 국제협력을 도출하는 유용한 틀일 수 있다. 이 4자회담은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으로서 그리고 북한을 국제사회의 정상국가로 인정하는 과정으로서 그 의미를 지닐 수 있다.<sup>62)</sup> 이 4자회담이 유럽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다자간 안보 및 경제협력으로 발

62) 4자회담을 기반으로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군비통제와 비핵지대화의 건설 그리고 한반도 통일 이전의 정치공동체 형성에 따른 5자회담 체제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과정에 대한 구상으로는, 이삼성, "한반도 평화체제의 비전과 요건: 3단계 평화과정의 개념," 팍태환 외,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7) 참조.

전할 수 있을 때, 한반도의 평화과정은 완료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에서 개발된 협력적 안보와 포괄적 안보라는 개념 및 규범이 동북아 또는 동아시아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는 큰 논쟁의 대상이다.<sup>63)</sup> 동북아에서의 다자적 안보협력 및 경제협력은, 동북아지역에서 가장 갈등의 가능성이 높은 한반도의 위기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유리한 안보 및 경제질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권력정치에서 한국은 열위에 있다. 그리고 동북아지역에서 패권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은 한·미, 한·일 군사동맹을 통해 지역차원의 균형을 유지하려 하고 있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자국이 배제된 동아시아 또는 동북아시아 협력보다는 이른바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 차원에서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협력은 현실을 벗어난 이상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러나, 동북아 다자적 안보협력은 유럽의 경험을 반추하면서 후발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안보에서 자유주의적 철학의 확산 및 심화를 고려할 때, 실현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북한 위협론이 다자적 안보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문제와 동북아의 전략적 지형의 변혁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sup>64)</sup> 다른 한편으로 1997년 동아시아를 휩쓴 금융·외환위기는 동아시아국가들에게 정부 및 민간차원의 협력이 없다면 위기의 반복적 재생산을 막을 수 없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이 위기를 계기로 동아시아국가들의 위기의식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고, 위기의 반복적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모색되고 있다.<sup>65)</sup> 즉, 동북아에서도 안보협력 및 경제협력을 위한 수요요인이 증가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다른 한편, 동북아 및 동아시아지역에서도 시민사회의 연대에 기초하여

63) 유럽의 경험은, 구갑우, “국제기구의 인도적 포용정책,” 『국가전략』, 7: 2 (2001) 참조.

64) 박건영,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의 현실과 전망: 탈냉전, 세계화, 한반도 상황 변화가 가지는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16: 2 (2000), pp. 88~9.

65) 김용복·구갑우, “동아시아지역 국제경제기구의 형성 및 제도화” 『한국과 국제정치』, 16: 2 (2000).

자본주의사회의 변화에 개입하기 위한 계기로 동아시아 공동체의 건설을 추구하는 '비판적 지역주의'도 형성되고 있다.<sup>66)</sup> 지적 실험으로서 동아시아라는 문제설정은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시민사회 중심의 수평적 연대를 창출하려는 움직임이다. 비판적 국제이론의 문제의식처럼, 한반도의 평화과정은 지구적 수준 그리고 지역적 수준의 민주주의에 기초한 초국가적 정치공동체의 건설이 없다면, 그 실현이 어려울 수도 있다. 동북아 또는 동아시아 수준에서 시민국가(civic states)의 연합체로서 지역국가의 구상은 한반도의 평화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적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sup>67)</sup> 이 시민국가는 국가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초국가적 시민사회가 국가의 우위에 선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즉, 그람시의 국가/사회 복합체로 정의되는 확장국가의 역전된 형태다.

국가간 경쟁에서 야기되는 안보위기와 전지구적 자본주의가 초래할 수 있는 경제적 불평등을 규제하려는 새로운 정치공동체로서의 시민국가의 연합에 대한 구상은, 한반도에서의 탈/비국가적 통합 또는 통일구상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유럽적 상상력이기는 하지만 주권의 부분적 이양은 남북한 관계에도 가능할 수 있다. 즉 통일을 평화의 부분집합으로 설정하면서 통일이 야기할 수밖에 없는 권력투쟁을 우회하는 시민사회/경제사회 중심의 통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남북한의 국가성은 유지하면서 비폭력적 강제를 행사하는 중앙권위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국가연합 구상이나 다층적 통치가 작동하는 복합국가의 구상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다원적 안보공동체 더하기 경제적 국가연합"을 통일국가의 형태로 상정할 수도 있다. 이 '국제정치적 상상력'은 무력통일과 흡수통일과 합의/무력통일이라는 역사적 경험에 대한 반성으로도 그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 V. 결론

현실주의 이론에 입각할 때, 한반도의 평화과정은 냉전적 평화 또는 지

66) 정문길 외 엮음, 『발견으로서의 동아시아』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0).

67) Y. Sakamoto, "An Alternative to Global Marketization," *Alternative*, 24: 2 (1999).

속적인 전쟁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현상유지를 수용하는 것이다. 강대국 중심의 정치에 한국과 같은 소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국제정치경제의 세계가 현실주의 이론이 주장하듯, 반드시 물질적 능력으로만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행위주체가 다양한 방식의 의식적 실천과 개입을 통해 국제체제의 변화와 새로운 질서의 구축을 모색할 수 있다. 탈냉전과 더불어 이 자율성의 공간이 확대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비판적 국제이론에 입각한 한반도 평화과정의 기획은 대안적 문제설정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즉 현실주의 이론과 권력정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국제정치경제의 세계에서 한반도 평화과정에 대한 대안적 경로를 모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판적 국제이론에 입각한 한반도 평화과정은 유토피아적 사고로 폄하될 수도 있다. 그리고 평화의 실현을 위한 치밀한 지도가 작성되지 않은 미완(未完)의 기획으로 평가될 수 있다. 대안적 연구의 제의 설정이 현 수준에서 비판적 국제이론의 최대치임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실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유토피아적 사고가 없다면, 우리는 주어진 현실을 수용하는 것 이상의 행동을 하기 힘들다. 구조적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그 구조를 변혁할 수 있는 맹아를 발견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같은 규범적 목표의 실현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비판적 국제이론에서 지적하듯이 이론적 실천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적 실천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비판적 접근의 가능성은 현실에서 발견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현실에 기초하여 다시금 비판적 기획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변증적 과정은 한국외교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한반도문제의 국제적 성격을 고려할 때,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과정에서 한국외교가 차지하는 위치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한국외교는 남북한 관계 및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과 북한과의 관계에서 적극적인 중개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중개역할이 사전에 포기된다면, 한반도 평화과정은 출발부터 난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외교는 다양한 국제적 차원의 진보적인 외교적 자산-예를 들어 유

럽연합의 북한에 대한 '건설적(constructive) 포용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교정책에 있어 균형성과 탄력성을 가져야 한다.<sup>68)</sup> 한국정부는 미국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국제사회 및 한국 시민사회의 합의된 '규범'을 미국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규범에 기초하여 미국에 대해 탄력적 외교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새로운 외교는 한반도에서 남한의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국제적 공공재로 만들기 위해서도, 그리고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를 위해서도,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반도의 평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68) 구갑우, "탈냉전 시대, 북한과 유럽연합의 관계," 『평화논총』, 5: 2 (2001).